

지역 참일꾼 뽑기... 오늘부터 사전투표



북구청 사전투표소 설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7일 오전 광주 북구청에 마련된 용봉동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직원과 공무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북미정상회담 이슈에 묻히고 민주당 독주에 맥빠진 선거 광주·전남 투표율 50~60%대 역대 지방선거 최저 우려

오늘부터 9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4·5면>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인데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유난히 투표율이 낮았던 만큼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도 50~60%대로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따라서 지역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을 견인할 수 있는 사전투표부터 관심을 갖고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선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 따른 일부 지역에서의 맥빠진 선거와 후보들 간 정책 선거 대신 고소·고발, 네티즌 등이 판치면서 유권자들의 무관심

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투표율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 이슈와 북미정상회담 등 연이은 대형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역대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비판적인 분석도 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지역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제1회 64.8%, ▲제2회 41.5%, ▲제3회 42.4%, ▲제4회 46.3%, ▲제5회 49.8%, ▲제6회 57.1%다.
전남은 ▲제1회 76.1%, ▲제2회 68.2%, ▲제3회 65.6%, ▲제4회-제5회 각각 64.3%, ▲제6회 65.6% 등으로, 전반적으로 광주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광주 지역 전국지방선거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1995년 60%대를 기록한 뒤

50%대를 넘지 못했다가 사전투표제가 처음으로 시작된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50%대를 넘어섰다. 반면, 최근 10년 이내 열린 대선 투표율은 광주가 평균 80%대였고, 전남은 70% 후반대를 기록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는 광주가 제18대 42.4%, 제19대 52.7%, 제20대 61.6%를 기록하는 등 투표율 상승세를 보였고, 전남도 제18대 50%, 제19대 56.7%, 제20대 63.7%로 상승중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은 이번 선거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보수정당과의 대결구도까지 사라진데다, 후보간 비방전, 네티즌의 공격, 고소·고발이 판치면서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하루 전날 열리는 북미정상회담과 이 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終戰) 선언' 등 초대형 이슈가 터질 경우 지방선거는 더욱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심판'이라는 투표 동기도 적은 데다 민주당이 워낙 독주하고 있는 만큼 내가 굳이 찍지 않아도...'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경우 투표율이 광주 50%, 전남 60% 벽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최근 중앙선거위가 조사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투표율이 상승할 여지는 남아있다. 무엇보다 오는 8

~9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정당과 후보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투표율 올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 사전투표는 이틀동안 광주 95개, 전남 297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가능하다.
사전투표의 경우 대부분 젊은 층 참여가 많기 때문에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고, 역대 선거 투표결과를 보더라도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각 정당과 선관위도 사전투표를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야도 지도부가 나서 뒤늦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고, 여·야 각 후보들도 페이스북, 카톡, 트위터 등을 통해 SNS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선관위는 꾸준하게 지역 선관위별로 다양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 등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던 개헌 투표가 무산되고, 대형 이슈가 많아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국회의원 재선거와 교육감 선거도 있는 만큼 전체적인 투표율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멀어지는 남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서 종전선언 할까

靑 "성사 가능성 작아져" 되기 쉽지 않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없느냐'라는 말에 "지금 시점에서 한다, 안 한다를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청와대의 다른 고위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에 가는 것은 좀 어려워지는 분위기가 맞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내달 문정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라는 질문에는 "다 추측일 뿐"이라며 "그에 대해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동안 청와대 내에서는 실무 준비를 고려해 봐도 북미정상회담의 'D-5일'이 되는 이날까지는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이날까지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아무 결정이 내려지지 않자, 청와대 이제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내리는 모양새다. /임동욱 기자 tuim@연합뉴스

'드루킹 특검' 허익범 변호사 임명

문대통령, 국회 추천 존중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허 특검이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허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루 연가를 냈지만, 특별법에 규정된 임명 시간이 이날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허 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
사법연수원 13기인 허 특검은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관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다.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허익범 특검

말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허 특검은 이후 수사팀 구성과 조사공

간 확보,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초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여론에서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매크로(지동인력반복) 프로그램 동원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
6·13 격전지를 가다 - 고흥
-힘있는 민주당 vs 견제할 평화당 ▶5면
KIA, 사직서 롯데와 3연전
-미래의 중시 최원준·한동희 대결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바쁘시면 먼저 투표하세요! 사전투표참여 (6월 8, 9일 06:00~18:00 신분증 지참)

내 삶이 바뀌는 세계 1등, 전남 행복시대

도민이 꿈꾸는 내일, 도민과 함께 김영록이 만들겠습니다.

김영록이 걸어온 길

- 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전)
- 제18,19 대 국회의원
-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전)
- 민주당 사무총장(전)
- 강진·완도 군수(전)
-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주요공약사항

- 어르신들께 폐렴·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지원
- 주거취약 어르신께 공공임대형 '안심효도주택' 공급
- 어린이집·유치원 공기청정기 보급, '미세먼지 차단'
- 어린이집 급간식비, 친환경 식재료사용 지원 확대
- 만 18세이상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가입비 지원
-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 연 20만원 확대
- '전남형 기본소득제도 도입 추진위원회' 구성

1

일 잘하는 도지사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지사 후보